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이 충북 충주시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2018 대표자 경영연수'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협 강원도회, 대표자 경영연수... 회원사 발전방안 등 모색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충북 충주시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2018 대표자 경영연수'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영연수에는 강원도회 소속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교양강좌를 비롯해 최근 국토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연구 용역을 담당할 국토연구원 안종

욱 박사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오인철 회장은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대내외 건설환경 속에 건설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건설업 업역 개편과 더불어 내년도 SOC 예산 확보 등 굵직한 현안사항 등이 많은 만큼 회원 간 교류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평창군 내년도 예산 4043억 편성... 평화특례시 추진 등 총력

강원 평창군은 2019년도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499억원 증액된 4043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예산 편성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은 평화특례시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는 3대 핵심가치 추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명품도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왕기 군수는 "내년도는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시발점이 될 평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연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공사 ‘工期’ 산정 때 준비기간 최대 90일 반영

국토부, 적정 공기 산정기준 초안 마련
비작업일수에 악천후 등 기후변화 포함
공기연장 추가공사비 실비산정기준 제시
다음달 5일 공청화… 연내 제정 마무리

앞으로 공공공사의 준비기간은 최대 90일, 정리기간은 최대 30일을 각각 인정해 줄 전망이다. 또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등도 구분해 공기 산정에 반영된다. 공기연장 사유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실비로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 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기 산정기준 마련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데다 건설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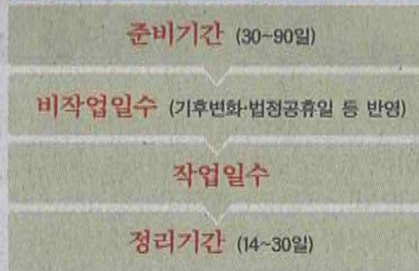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기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에 쫓긴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에 공기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기로 했다. 준비기간·비작업 일수·작업 일수·정리기간 등으로 구분해 적정 공기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



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 일수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한다.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기 연장 사유를 명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산정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실비 산정기준의 경우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정 당국의 영역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별로 다른 공사 여건을 공기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군 작전 지역이나 도서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악지형 등은 공기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입찰서류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이번 공기 산정기준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공기 산정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 SOC예산 25兆 이상 편성해야”

유주현 건설협회장 요청… “公共 공사비 현실화도 시급” 강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2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회기반시설)가 답”이라며 내년 SOC 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청했다.

유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년 수퍼 예산안 중 유일하게 SOC 예산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SOC 예산을 최소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0년 만에 최대인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SOC 예산이 18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SOC 예산안이 1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내년 예산은 2.3% 감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또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을 생활 SOC로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확대에 필요한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 교량, 철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과연 정부가 말하는 주민 체육시설 확충, VR(가상현실)체험존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 확대를 최소화하는 대신 8조 7000억원의 ‘생활 SOC’ 예산을 편성했다.

유 회장은 아울러 공공사업 공사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액이 12.2% 하락했고,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



격심사제의 나찰 하한율은 17년간 고정되어 실질 낙찰가율이 공사비의 70% 대로 떨어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가 지난 2014~2017년까지 4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8건(37.2%)이 100%를 넘어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일반관리비와 이윤 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체 1900개사가 폐업을 했는데 이는 전체 건설사의 16%에 달하고,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해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6.98%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일반관리비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를 하고 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용 여건이 지속해서 나빠지면서 산업기반의 붕괴 위기감도 팽배하다”며 △순공사원가 지급 △100억~300억원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약 10% 상향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정상화 등을 통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강원 건설업계, 내년 SOC사업 국비 정상화위해 총공세

지역 예결특 국회의원 일대일 공략

동해항 항만연결도로 조기개설
국지도 28호선 공사 설계비 반영
동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놓고
건협 강원도회, 적극 협조 요청

강원도 건설업계가 감축된 도사회간접 자본(SOC)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對)정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 원주 등 각 지역구 출신의 예산결산특위 국회의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도 SOC사업 예산 반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예산 정국을 맞아 지역구 출신 국회 예결특위 위원과의 간담회를 늘리고 있다. 건협 강원도회는 최근 이철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은 물론, 유주현 건협 회장까지 동행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해·삼척 지역 국비지원 요청 사업을 건의했다. 우선 동해항 항만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건의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라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지만, 항만 전용 진입도로가 없어 항만물류 수송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도로 정체가 심화돼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동해항 3단계 부두운영 시기와 교통수요를 고려해 국도 38호선에서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협 강원도회는 동해항 연결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신설 2.8km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 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의

동해항 항만연결도로 사업 추진 현황

(자료: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위치	국도 38호선 시경계 ~ 국도7호선	
사업규모	도로개설 L=2.8km, B=25m	
시행청	해양수산부	
추진경위	2014.11.27	동해항 3단계 개발에 항만전용 진입도로 반영건의
	2015~2016	해수부차관, 장관 동해항 방문시 건의
	2016. 9. 29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2018.4	신설 2.8km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기재부 신청
필요성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라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나 항만전용 진입도로가 없음. 항만물류 수송분담 애로 및 기존도로 정체·소음 등 민원발생 우려	
건의	신설 2.8km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5억원) 2019년 예산 반영 건의	

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동해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21억원도 요청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필요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492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송정(11km), 부곡(15km), 북평(24km), 총 50km 구간에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현재 강원도 건설기술심사가 완료됐다. 도회에서 사업비 21억원을 요청한 이유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의 정상운동을 위해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지도 28호선 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비 반영도 건의했다. 삼척시 미로면 하장리에서 하장면 속암리까지 14.4km 구간을 2차로로 개량하는 이 사업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다. 건협 강원도회는 국가계획기간 내 사업 착수를 위해 5억원의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10일 오인철 강원도회 회장은 김정섭 도회 부회장과 함께 국회 예결위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회장은 송 의원의 지

역구인 원주지역의 SOC 사업 191억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건협 강원도회에서 예결위원인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이유는 도내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구 현안에 민감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역구 예산 확보는 지지율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두 의원 모두도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고, 지역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